



## 코로나 사태는 미중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

저자 (Authors)	박홍서
출처 (Source)	<a href="#">황해문화</a> , 2020.9, 54-71 (18 pages) <a href="#">HWANGHAE REVIEW</a> , 2020.9, 54-71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새얼문화재단</a> SAEUL FOUNDATION OF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7407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74077</a>
APA Style	박홍서 (2020). 코로나 사태는 미중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황해문화, 54-71.
이용정보 (Accessed)	한국외국어대학교 203.253.93.*** 2021/04/13 04:5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코로나 사태는 미중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박홍서

미중관계가 총체적 위기처럼 보인다. 2020년 1월 1단계 합의로 미중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다.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가 중국 때문이라고 연일 비난하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까지 위협했다. 이에 맞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오명을 씌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트럼프가 자국 내 방역 실패를 중국 때리기로 돌파하려 한다며 “미쳐 날뛰게 놔두자”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한, 미중 양국은 상대방 언론인들을 추방했고, 홍콩보안법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둘러싸고도 제재와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는 양국 군대의 작전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중관계가 과거 미소관계처럼 ‘신냉전’으로 들어섰다는 주장을 한다거나 경제 영역에서 이제 양국이 ‘결별 decoupling’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좀더 구조적인 차원에

서, 미중관계가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학자 앨리슨Graham Allison이 주장하듯이, 패권국 미국이 부상국 중국에 가지는 구조적인 공포심이 결국 양국 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972년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과 1979년 관계 정상화,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미중 양국은 이제 제 갈 길을 가기로 한 것일까?

##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리바이어던

행위 변인과 구조 변인은 세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분석 단위이다. 미중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다르지 않다. 미중 관계를 양국의 속성이나 정책결정자들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위 변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패권국과 부상국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구조 변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미중갈등 역시 이 두 가지 분석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의 갈등 양상이 트럼프 정권이나 시진핑 정권의 독특한 행태라는 행위 수준의 문제인데 그것을 구조 수준의 문제로 판단한다면, 미중갈등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위냐 구조냐의 문제를 판단하려면 미중관계를 좀더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즉, 역사적으로 정권의 변화 등에 따라 미중관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이었는지 판별해보는 것이다. 이런 판별은 분명 지난한 작업이겠지만, 미중관계가



그동안 '자유무역'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의 행태를 보이는 반면, 중상주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비판받았던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국가임을 반증한다. 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소간의 부침에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에 따라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미중 양국은 1979년 관계 정상화 이후 1989년 천안문 사건이나, 1995~1996년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 그리고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등 같은 정치적 문제로 대립했지만,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충실히’ 준수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무역분쟁 역시 양국 경제관계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담겨 있다. 즉,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에 더욱 충실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중국도 이런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무역과 자유무역을 지지한다.”<sup>1</sup>

위의 말은 미국 정책결정자의 발언이 아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말이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 갔다며 트럼프 정권이 무역전쟁을 개시하자,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의 행태를 보이는 반면, 중상주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비판받았던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국가임을 반증한다.

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의 경제적 성취는 중국이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

---

1 Evelyn Cheng and Everett Rosenfeld, “China’s Xi again talks up commitment to ‘free trade,’” CNBC, 2018. 11. 4.

임을 보여준다. 개혁개방 직전 중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GDP는 2위로 올라섰고 조만간 미국마저 초월할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매력 기준 GDP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통계 도 있다. 1958년 대약진 운동 당시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겠다던 마 오쩌둥의 원대한 포부가 이제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통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전략이었다. 마오쩌둥이 계급투쟁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폭력 과 규율로 통치하려 했다면, 덩샤오핑은 경제 통치에 중점을 두었다. 푸 코Michel Foucault의 개념을 빌려 표현하면,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을 “죽이거나 살게 내버려 두었다”면, 덩샤오핑은 “살리거나 죽게 내버려 두 는” 통치 전략을 구사했다. 덩샤오핑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중국의 경 제발전이 따라 중국 공산당의 집정 지위가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특히, 민족주의 세력)에게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중국 공산당 스스로도 그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유통해왔다. 시 진핑 정권이 주장하는 ‘중국의 꿈’이 대표적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 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강사회(全面小康社會: 중산층 사회)’ 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가 장 필요한 것은 덩샤오핑이 요약하듯 생산력 발전이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라도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발전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 한 ‘담론’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이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진입해 엄청난 경제적 성취를 이뤘다

면, 미국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중국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일까? 물론 그럴 리 없다.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만들었고 따라서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이다. ‘달러 패권’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지지 않는 달러 패권

1944년 1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다. 각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대표들이 모여 전후 국제 경제질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로 불릴 것들이었다. 그 핵심은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대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는 끝까지 달러의 기축통화 설정을 반대했으나 미국 대표 화이트 Harry Dexter White의 주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인의 역량 때문이 아니었다. 영국의 패권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산업생산력 등에서 영국을 뛰어넘었지만, 영미 간 패권 전이는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완성’됐다. 영국은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파운드화를 대량으로 조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기축통화로서의 안정성이 흔들렸다. 반면, 미국은 유럽 국가에 전비를 대부해주면서 단숨에 채권국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미국은 전쟁 막판 군사 개입을 통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을 ‘구원’해주기까지 했다. 패권국 영국이 해결하지 못한 상황을 미국이 해결해준 것이다. 영미 간 패권 전이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그 결과였을 뿐이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라 할 수 없다. 차라리 그것은 미국이 독점 생산·

유통시키는 일종의 금융 희토류라 할 수 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희토류가 필요하듯이 국가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가 없으면 무역 결제가 힘들다. 자국 통화로 결제하고 싶어도 상대국이 달러 결제를 요구한다. 달러가 가장 믿을 만한 결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2019년 국제무역에서 달러 사용 비중은 무려 88.3%이다(200% 기준). 즉, 무역 당사국 중 어느 하나라도 달러를 사용할 확률이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4.3%에 불과한 위안화 결제 비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sup>2</sup> 게다가 달러가 부족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자산을 외환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이우다. 2020년 1분기 현재 전 세계 외환 준비금 중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1.99%에 달한다. 반면, 위안화 비중은 2.02%에 달한다. 역시 비교조차 할 수 없다.<sup>3</sup>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조차도 그 대부분을 달러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다. 달러 패권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상황은 당연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달러를 무기 삼아 패권을 유지·강화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다른 국가들은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미국이 달러 공급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미국은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한 국가에 IMF 등을 내세워 ‘구조조정’을 압박한다. 그렇게 해당국 경제는 미국의 이익에 맞게 조정한다. 1997년 한국의 IMF 위기는 그 생생한 사례였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국가들은 위기 이후 더더욱 달러를 쟁여놓기 시작한다.

2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19 –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19. 9. 16, p 5. [https://www.bis.org/statistics/rpfx19\\_fx.pdf](https://www.bis.org/statistics/rpfx19_fx.pdf)

3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 IMF, <http://data.imf.org/?sk=E6A5F467-C14B-4AA8-9F6D-5A09EC4E62A4>

그렇게 ‘달러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물론 전후 달러 패권의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이라는 수렁에 빠져 그 전비를 충당하려고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자 달러의 안정성이 흔들리기도 했다. 금 1온스에 35달러라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원칙을 미국이 스스로 위배한 것이다. 그럴수록 다른 국가는 달러를 들고와 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뱅크런 사태의 조짐일 수도 있었다. 미국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대외 무역적자를 미국에게는 큰 손해일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곡해’하듯 그렇게 볼 수 없다. 달러를 미국이 독점 생산하는 상품이라 간주한다면, 막대한 무역적자는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수출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국가에게 달러 확보가 시활적이라면,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상품을 수출한다고 볼 수도 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못 바꾸어 주겠다!’라는 선언이었다. 1971년 닉슨은 금-달러 태환의 중지를 호기롭게 선언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달러 패권은 약화되지 않았다. 미국이 부족한 것은 금이었지, 압도적 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미국의 종합국력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달러를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구

매했다. 결국 금-달러 태환이 미국의 국력-달러 태환으로 변화됐을 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도 각 국가들이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것은, 망해도 미국이 가장 마지막에 망할 것 같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도 전 세계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르는 이유다.

금-달러 태환 중지 이후 미국의 새로운 달러 패권 전략은 달러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금융 히토류의 대외 수출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그 구체적 방식은 대량의 무역적자를 감내하는 것이었다. 또, 중



동 산유국들을 압박해 원유 거래의 달러 결제를 유도했다. ‘오일 달러’의 출현이었다. 그렇게 달러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대외 무역적자를 미국에게는 큰 손해일 것이라고 간주한다. 트럼프 식의 그런 의도적인 ‘곡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달러를 미국이 독점 생산하는 상품이라 간주한다면, 막대한 무역적자는 미국이 그만큼 달러를 수출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국가에게 달러 확보가 시활적이라면,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상품을 수출한다고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국들은 자국의 대미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다시 미국으로 환류해 미국 소비 시장을 부양시키기까지 한다. 여기서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는 달러를 발행해 전 세계로 환류시키는 것밖에 없다.

미국의 달러 확산 전략은 베트남전이라는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제조업 이윤율 하락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후 한국 같은 신흥 공업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겹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응 전략은 한편으로는 월가로 상징되는 금융자본 강화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산업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금융자본과 지식기반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훨씬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 미국 상위 10개 기업 중 9개가 금융기업과 정보통신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220여만 명을 고용한 월마트가 순이익 순위 40위에 머문 반면, 4만여 명이 채 안 되는 직원의 페이스북이 6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sup>4</sup>

## 중국 경제발전의 ‘허상’

“중국의 경제적 성취는 달러 체제 내의 지위 변화에 불과하다.”

중국 경제학자 리샤오(李曉)의 단언이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성장은 달러 패권 체제(‘신’브레튼우즈 체제)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역할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중 신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구성국은 시기 순으로 보면, 일본 이후 한국과 타이완 같은 이른바 ‘네 마리 용’ 그리고 중국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교 당시만 해도 거의 전무했던 무역흑자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 현재 무려 3,452억 달러에 달한다. 같은 해 중국의 총 대외 무역흑자가 4,118억 달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한 해 달러 획득의 84%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즉,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없으면, 달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미국의 ‘무기’가 된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 보복관세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복관세 만큼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달러 공급을 ‘감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18년 4,190억 달러에서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3,452억 달러로 감소했다. 중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4 “Fortune 500”, Fortune, <https://fortune.com/fortune500/2019/search/?employees=desc>

5 “Trade in Goods with China”,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 CGTN, “China’s foreign trade hit \$4.6 trillion in 2019,” 2020. 1. 14.

또한, 중국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다시 미국 국채 매입 방식으로 미국으로 환류한다. 미국 소비시장을 부양하여 자국의 수출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통한 대미 수출 진작을 위해서라도 달러화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현재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1조 728억 달러에 달해 일본(1조 2,660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sup>6</sup> 중일 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총 국채의 35%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국가임을 보여준다.

중국이 달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통화 패권 체제에만 취약한 것은 아니다. 지식 기반 산업 부문에서도 취약하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전략적으로 일반 제조업은 타국에 ‘양보’하고 정보통신으로 상징되는 지식기반 산업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타국의 저렴한 양질의 일반 소비 상품을 수입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반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을 수출해오고 있다. 2019년 미국의 지적재산권 수익은 1,289억 달러로 2위인 일본(468억 달러)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이다. 중국의 수출액인 66억 달러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sup>7</sup>

일반 제조업 상품에서는 중국이 3,452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얻고 있지만, 서비스 상품에서는 오히려 364억 달러의 대미 무역적자<sup>8</sup>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기술을 수입해 첨단제품을 생산해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뜻

6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0. 7. 16, <https://ticdata.treasury.gov/Publish/mfh.txt>

7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ceipts(BoP, current US\$)”,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GSR.ROYL.CD?locations=US-CN-JP>

8 “U.S. Trade in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Press-Release/current\\_press\\_release/exh20b.pdf](https://www.census.gov/foreign-trade/Press-Release/current_press_release/exh20b.pdf)

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혁개방기 중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지식에 따라 물건을 생산해 공급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본사가 제공하는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상황과 같다. 온전히 중국의 대미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기기 생산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취약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취약성은 큰 문제라 할 수 없다.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품목은 다른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고 또 미국 스스로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러나 기술지식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미국 이외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중국의 근원적인 취약성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GDP 같은 양적 기준을 통해 중국이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는 중국의 대미 ‘취약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즉,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는 미국이 달러와 기술지식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기기 생산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취약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취약성은 큰 문제라 할 수 없다.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품목은 다른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고 또 미국 스스로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러나 기술지식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미국 이외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중국의 근원적인 취약성이다.

중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부터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수행해온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참여국과의 무역거래 및 인프라 건설 등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려가

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디지털 위안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9</sup> 아울러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라는 명칭하에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중국만의 기술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총리 리커창의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sup>10</sup> 그동안 미국과 선진 자본국들의 기술지식에 따라 물건을 생산해온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와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것과 그러한 목표가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목표 달성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스크를 만들고 의료장비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안화가 달러에 필적하려면, 그것이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을 타국에 주어야 한다. 그러한 신뢰는 결국 중국의 종합국력으로부터 나온다. 군사·생산·금융, 그리고 소프트파워까지 타국이 중국을 신뢰해야만 위안화를 구매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신뢰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 멀다.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부문은 제외하더라도, 원천기술 없는 생산이나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금융 부문,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라는 소프트파워 부문까지 중국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만만찮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기업관리와 통제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그만큼 어렵게 만

9 韩玉军·王丽, 「‘一带一路’推动人民币国际化进程」, 『国际贸易』第6期, 2015, pp 46~47; Kenneth Rogoff, “A Chinese digital currency is the real threat, not Facebook’s Libra”, The Guardian, 2019. 11. 11.

10 中央政府门户网站, “李克强: 装备制造业要成为我国科技创新的主战场”, 2015. 6. 17. [http://www.gov.cn/xinwen/2015-06/17/content\\_2880960.htm](http://www.gov.cn/xinwen/2015-06/17/content_2880960.htm)

들고 있다. 첨단기술은 기업 간 자유경쟁이 있을 때 비로소 큰 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자유로운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업 통제,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등 오히려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CCP(중국 공산당) 리스크’를 과연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을까?

## 결별은 없다

일반적으로 미중관계에 관한 주류 담론은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맞춘다. 극단적으로 군사충돌까지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갈등지향적으로 전개된다는 것과 그것이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혼동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충돌이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양국 정책 결정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핵 억지력을 가진 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승자와 패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과거 미소관계가 결코 ‘열전’이 될 수 없었던 이유다. 미소 양국은 상호충돌을 극도로 회피했다. 스탈린이 한국전쟁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은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트루먼이 중국에 대한 핵공격을 주장하는 맥아더를 경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모두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핵무기 시대 이전 국가들은 외교가 막히면 전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이상 그런 논리는 통용되기 힘들다. “전쟁은 또 다른 수단의 정치”라는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의 경구는 이제 “정치와 경제는 또 다른 수단의 전쟁”이라고 전도되어야 한다. 최소한 핵 억지력을 가진 강대국 간의 관계는 그렇다.

이와 같다면, 타이완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갈등은 전쟁을 대비하는 지정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경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적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대일로’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 출발선인 남중국해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미국은 전통적인 문호개방정책을 위해서라도 ‘자유항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근육’을 과시함으로써 지역 동맹국들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신용이 있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중 간 군사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전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제 내 경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국이다.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에 편승함으로써 비로소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뒷받침으로 하여 일당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을 불사할 이유는 없다. 중국이 반복적으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중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와 ‘일방주의’를 구분하려 한다. 자유무역과 UN 등 다자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3월 말 이전까지 중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칭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또, 신장 위구르족의 대규모 캠프 건설이 “정확히 옳은 일”이라 했고,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이는 누구였을까? 모두 트럼프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호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재 트럼프 정권이 보여주는 미국의 독선적인 일방주의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1</sup>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보수주의 담론은 미중 결별과 심지어 패권전쟁 가능성까지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과 실체는 구분되어야 한다. 트럼프 정권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가 중국을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도전자”로 규정하고 미국 방장관은 중국을 “최대 위협국”이라고까지 말했지만,<sup>12</sup> 실제로 미국이 대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합리적 이유는 없다. 전후 미국 자신이 구축한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핵심국인 중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달러 패권의 유지라는 목표는 둘째 치고라도 핵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기후변화, 전염병 등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중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상위 강대국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이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패권 유지 비용은 막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 1970년대 닉슨 정권이 중국에 접근했던 것 역시 베트남전 철군으로 초래될 동아시아 세력 공백을 메꾸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기인했다. 정치학자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의 설명처럼 보다 효율적인 패권 전략이었던 것이다.<sup>13</sup> 소련 붕괴 후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팽창 저지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 해결에 미

11 정아란, 「한중, 서울서 외교장관회담…왕이 “일방주의, 세계안정 위협」, 《연합뉴스》, 2019. 12. 4.

1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2017. 12, pp. 25~26.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 Robert Burns · Matthew Lee, “US defense chief slams China as rising threat to world order”, Associated Press, 2020. 2. 15.



국이 막대한 외교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미소관계는 갈등관계였지만, 양자는 전후 ‘알타 체제’의 안정이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 소련이 건재했다면, 이라크나 유고 문제가 그렇게 파국으로 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냉전기에는 소련이 그들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냉전기조차 미소 양국이 국제질서 안정을 위해 협조했다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현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핵심 국가이기도 하다. 부시 정권의 국무부 부장관 졸릭 Robert Zoellick이 미중관계를 ‘이익상관자’라고 부르고, 오마바 정권의 국무장관 클린턴 Hillary R. Clinton이 미중관계를 “한 배에 탄 운명”이라 불렀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 연일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심지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겁박하는 트럼프 정권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3월 말 이전까지 중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칭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또, 신장 위구르족의 대규모 캠프 건설이 “정확히 옳은 일”이라 했고,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이는 누구였을까? 모두 트럼프였다. 그는 시진핑에게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미국 농산물을 구입해 달라기까지 했다. 그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sup>14</sup>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재선을 위한 ‘소극’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13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91~193.

“미국의 매우 중요한 이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

1994년 5월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의 발언이다.<sup>15</sup> 1993년 집권한 클린턴은 후보 시절부터 전임 부시 정권의 ‘유약한’ 대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과 최혜국 대우 부여 문제를 연계시키기도 했다. 매년 중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해서 최혜국 대우를 갱신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러한 조치를 채 2년이 안 돼 철회했다. 그가 말한 “미국의 매우 중요한 이익”은 물론 경제 이익이었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미국 독립혁명 직후인 1784년 미국 상선 ‘중국황후호’가 뉴욕항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일관된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이익의 확보였다. 이른바 ‘문호개방정책’이다. 사실 미국 독립혁명도 중국 차의 밀매를 금지한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비롯했다. 그만큼 미국은 태생적으로 대중국 자유무역에 대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후에도 미국은 일관되게 중국 시장의 개방과 자유무역, 기회균등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중국 영토의 보전을 요구했다. 그것이 누구라도 중국 시장을 독점하는 주체는 미국의 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중국 각지에 세력권을 형성했던 서구 열강이었고 이후에

14 Josh Dawsey, “Trump asked China’s Xi to help him win reelection, according to Bolton book”, Washington Post, 2020. 6. 18.

15 David M. Lampton,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99-200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p. 44~45.

16 Joseph S. Nye Jr., “No, the Coronavirus Will Not Change the Global Order”, Foreign Policy, 2020. 4. 16.

는 일본이었다. 태평양 전쟁은 중국에서 경제 이익을 독식하려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었을 뿐이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미국의 이익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태였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중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열심히’ 달려 패권 체제를 부양해 왔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독특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결정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관되게 지속된 구조의 문제다.

미중 양국은 정말 결별할 수 있을까? 2020년 코로나 사태는 미중관계의 예상치 못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5억 명이 감염돼 2,000여만 명이 죽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조차 국제정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정치학자 나이 Joseph Nye의 말처럼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결과였을 뿐이다.<sup>16</sup> 핵심은 역시 국가와 자본의 문제였다. 국가들의 세력 경쟁과 자본의 이윤 추구가 스페인 독감 이후의 세계를 결정했다. 핵무기 시대 강대국 간 전쟁이 ‘무의미’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본의 동학Economic dynamics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미중관계를 바라보면서 실제와 레토릭, 구조와 행위, 그리고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②

---

朴鴻緒,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1969년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아시아지역학과 석사, 동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상하이 사회과학원 방문학자로 활동, 주요 저서 「미중카르텔」과 주요 논문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대응: 중국의 대미 취약성과 그 함의」, 「자본의 이윤을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대응: 4차 산업혁명론의 비판적 해석」, 「중미관계와 '일대일로'의 정치경제: 달려패권에 대한 취약성 극복을 중심으로」 등, hongseo@hanmail.net